

미국, 식량원조 프로그램 개혁 필요성 강조

미국의 농업무역정책연구원(Institute for Agricultural Trade and Policy, IATP)의 새 보고서인 ‘미국의 식량원조(U.S. Food Aid: Time to Get it Right)’에 따르면, 미국 식량원조 프로그램(U.S. food aid programs)은 비효율적이고 개발도상국의 장기적인 기아의 원인과 식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보고서는 미국 식량원조 프로그램의 주요 수혜자는 개도국이 아니라, 식량원조 계약에 참여한 농산업 회사와 식량원조 프로그램 판매 수익을 이용하여 기금을 조성·확충한 사영 자원봉사조직(PVO)들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치적 연대로 인해 미국 식량 원조 프로그램의 개혁이 지연되었다. 기아에 시달리는 국가에 식량을 판매하거나 원조하는 미국의 관행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신속하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은 식량 원조가 필요한 국가에 현금을 지원해서 자국이나 인국 국가에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주요 식량원조자들은 식량을 비롯한 제품을 직접 원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있다.

미국의 식량원조 프로그램은 WTO에서도 논쟁 대상이 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두 가지 관행을 비판하고 있다. 하나는 미국이 PVO의 식량 원조를 위해 사용하는 화폐 주조가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한편, 수혜국의 국내 생산자들과 무역업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수출신용(export credit)이 식량 덤핑 수출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원조 프로그램은 생산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해외에 식량을 판매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WTO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모든 형태의 식량 원조를 현금 기초(cash-based) 형태로 전환하고 수원국(donor country)의 상품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하는 관행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식량 원조는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논점이 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적 절차가 혼란스러운 점도 미국 식량 원조의 문제점이라고 한다. 미국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와 미국 농업부가 여섯 가지 독립된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원조 수원국으로 2004년 전 세계 식량 원조의 57%를 담당했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은 식량원조 중 일부를 판매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리고 미국은 식량 가격이 높은 시기, 즉 식량 원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는 식량 원조를 줄이곤 했다.

전 세계의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개도국의 식량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단위당 생산량은 1960년에 비해 10% 감소했다. 사하라 사막 주변의 국가는 전체 식량원조의 절반 이상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이 중 4,000만 명이 심각한 기아 상태에 직면해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과 사하라 사막 주변 국가들은 한때 자급을 했었고 식량을 수출하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식량 순수입국이다.

식량원조 프로그램은 두 가지 목적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해서 아사를 방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하고 자급이 가능한 식량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다. IATP는 미국 식량 원조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1) 현금에 기초하고, 자국 상품에 국한되지 않는 식량 원조 체계로 전환
- (2) 식량 원조의 판매 금지
- (3) 현물(in-kind) 식량 원조에 엄격한 제한 부과
- (4) 식량에 관한 권리 보호
- (5) 각 국의 식량 안보 전략 존중
- (6) 강제력 있는 다자간 가이드라인 설정

자료 : 농업무역정책연구원(www.iatp.org)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

KREI